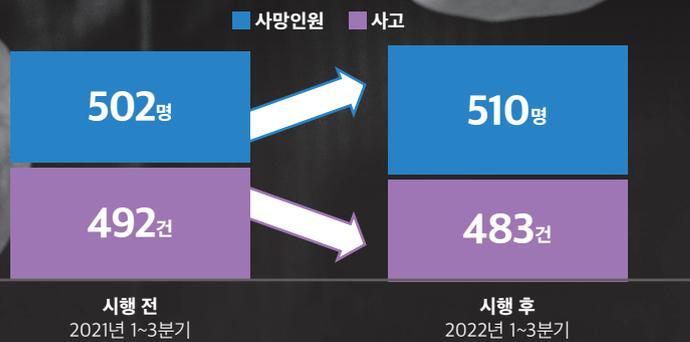


데이터로 읽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 산업재해 사망 사고



※ 사업장 규모·사고 내용에 따라 중대 재해로 분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 산재 사망 사고

중대 재해로 판단 **200**여건



- 1호 발생 삼표산업 : 1년째 조사·수사 중, 1호 기소 두성산업 : 1심 진행 중
위험법률심판 제청 신청 자료 :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법 시행 1년
중대재해 200여 건,
1심 선고 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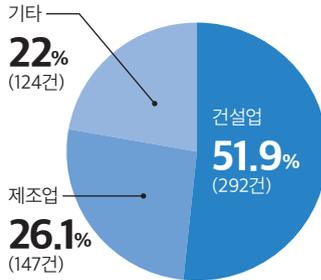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동안 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1심 선고가 난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다. 지표상 산업재해 사망자 수도 줄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1~9월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483건으로 2021년(492건)보다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고, 사망자는 510명으로 2021년(502명)보다 증가했다. 법의 모호성,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2024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에 앞서 법을 개정하기 위한 TF를 꾸린 상태다.

중대재해 발생 최다 업종은 건설업 형태는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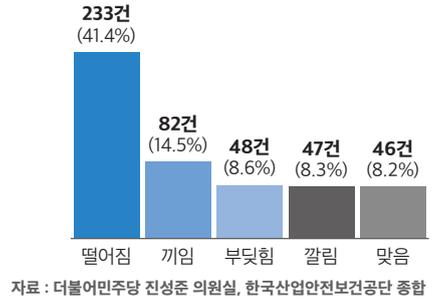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를 종합 집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대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12월 27일까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건수는 563건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92건(51.9%)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제조업이 147건(26.1%), 기타는 124건(22.0%)으로 뒤를 이었다. 형태별로는 떨어짐이 233건(41.4%)로 가장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
산업재해 사망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
산재 사망 사고



기업 규모별 대응능력 차이 중소기업 77% “부족”

기업 규모별 대응능력 차이도 두드러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간한 ‘2022 K-기업 ESG 백서’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2021년 환경·안전 투자 규모는 2020년 대비 87.6%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소기업 중 중처법 의무에 대한 대응능력이 충분하다고 답한 기업은 11.5%에 불과했다. 반면 응답 기업의 77%는 대응능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

중처법 대응능력에 대한 응답

